

정책제언 I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 더는 관대하지 말아야

도내 '가정폭력' 신고가 매년 6,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폭력으로 위협받고 있는 위험한 가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강원지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2만6,591건으로 한 해 평균 6,648건씩 발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실제 가족들 사이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흔히 부부싸움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속된 가정폭력 사범 중 존속 폭행으로 붙잡힌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의 빈도나 강도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도내에서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인원은 70명으로 한 해 평균 17.5명 정도였다.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검거 건수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현행법 체포가 어려운 탓이다. 지나친 온정주의 때문에 가정폭력 재범률은 되레 늘고 있다.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범죄의 상습성,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보호 및 유지'를 입법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반 폭력 사건이었다면 형사 처벌할 일도 가정에서 일어나면 접근금지 명령 등 미약한 처분에 그친다.

우리 사회에는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통념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집안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당하는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에 더 이상 관대해선 안 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지위, 학력, 빈부와의 관계없다.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 당사자가 먼저 나서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다.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경찰에 신고하기가 꺼려지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우려는 긍정적인 '이웃의 힘'도 필요하다.

출처 : 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강원 항만물류, 변화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강 달 원** | 가톨릭관동대 항공경영물류학과 교수

변화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변화의 중심에서 강원 영동권 항만들은 벌크화물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화물인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복합물류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8월 강릉시 옥계항에 일본~부산~옥계 노선에 신규 컨테이너 국제정기선이 입항하여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했으며, 동해·묵호항도 연내에 동해~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 동해안권 항만은 지리적 이점을 가진 환동해권 중심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해안권 항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화물 중심의 횡축물류권을 구축할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오랜기간 동해안권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들은 에너지자원 수급 및 산업 지원항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항만들은 석탄·광석·시멘트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던 특성으로 인해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오염 피해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동해안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많은 물류환경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산업 인프라가 확장되고, 제2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KTX 서울-강릉 및 동해선 개통 등 교통인프라 개선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향상됐으며, 평택-제천-삼척을 잇는 고속도로와 부산-포항-삼척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철도도 건설 중이다.

특히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계한 유라시아 철도 및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물류 루트로서, 인구 규모 약 1억 5000만 명, 경제규모 GRDP 약 2조 달러의 대규모 시장인 북방경제권이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동해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북방경제권과 연결되는 최단거리 교역권은 강원도 영동권이다. 이는 더 이상 변화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점에 서 있다고 봐야 한다.

환동해권 물류중심지,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횡축물류권 구축, 복합물류항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항만물류거점으로 도약하려면 항로의 다양화 및 다변화가 필수 요소다. 항로는 다다익선이다. 특히 기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지 않았던 항만들은 새로운 물류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화주에게 다양한 항로의 서비스를 제공,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대한 강원 영동권 항만의 역할을 인식시켜야만 한다. 현 시점에서 강원 영동권 항만에 여러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동해안권 항만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점이다.

그렇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강원도 항만물류의 성공적인 첫 항해를 위해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컨테이너 물류가 성장·발전하도록 해수청 및 지자체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관리항만인 옥계항이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컨테이너 처리 및 항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통해 동해안권 항만이 영구적인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및 지자체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복합물류항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동해권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차 지자체들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협치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파급효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동향

한국고용정보원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 지원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2종 개정 및 보급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정 및 보급했다고 밝혔다.
 - *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자신감 고취, 진로 탐색, 구직 준비 등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 최근 고용 환경의 변화,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의 특성 변화 등을 반영해 새일스타트와 새일플러스 2종의 프로그램을 보급했다.

[참고]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주요결과

-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 42.6%
- 경력단절 기간 : 8.9년
-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시 애로사항 : ①일자리 정보부족(16.8%), ②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13.9%), ③일자리 경험·경력 부족(13.5%), ④자녀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 시간 부족(13.0%)

- 진로탐색을 위한 새일스타트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나는 경력 '보유' 여성, ▲나의 삶과 일, ▲여성 고용환경 변화, ▲재취업 도전직업, ▲나의 성향 탐색, ▲나의 역량과 직업, ▲경단여성 재취업 준비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일에 대한 자신감 고취와 새로운 경력을 위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새일플러스는 진로가 결정된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희망직업 검토 및 확장, ▲취업희망직업 정보 탐색, ▲자기 이해, ▲채용정보 탐색, ▲취업희망직업 관련 강점 기술 등 재취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 이번에 개정·보급된 2종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는 누리집*이나 각 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전화 문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누리집 : saeil.mogef.go.kr / 대표 전화 : 1544-1199
- 김영중 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보급해 경력단절여성이 일터 복귀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하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동향

1. 개요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0.3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 '23.10.12.자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전○○ 무기징역 확정… 유족측 "가석방 안돼"」
- "이날 피해자 유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전고등법원 '22.1.25. 선고 2021노○ 강도살인 등 사건 판결문
- "피해자들의 부친은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서는 '사형을 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형을 해야만 사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피고인 죽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피고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오려고 아마 성실하게 생활할 겁니다. 살인자는 살인자일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 '22.1.19.자 중앙일보 「세모녀 살해 김○○ 항소심도 무기징역… "가석방 안돼"」
-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일부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오랜 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형벌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 "이날 재판이 끝나자 유족들은 오열하며 법정을 나왔다. 유족은 '풀어주지 말라.'며 '김○○과 같은 살인마는 세상에 나와서 햇빛을 보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짓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동향

-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第42條(懲役 또는 禁錮의 期間) 懲役 또는 禁錮는 無期 또는 有期로 하고 有期는 1개월以上 30年以下로 한다. 但,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對하여 刑을 加重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등) ①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無期) 또는 유기(有期)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다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신 설>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한다.
<신 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 ----- ----- . 다만, 무기형의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의 경우로 한정한다.

3. 향후 계획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관세청, 마약밀수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 관세청,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 개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발족 -
- 여행자 검사 강화 등 강력한 마약밀수 척결 의지 밝혀 -

- 관세청은 10.24.(화) 10:00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 고광호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개요

- [일시/장소] '23. 10. 24. (화) 10: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본청 및 전국 11개 세관 통관(여행자·우편·특송 등), 조사부서 마약관계관 28명
- [논의내용]
 - ① 올해 3/4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 ②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
 - ③ 추진단 주요 과제 추진방향 토의

정부동향

□ 고광호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 그간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 최근 선포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을 달성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목표가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통한 ‘사회의 안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특히 새로이 출범하는「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마약밀수 단속의 장애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새로운 과제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이날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살펴보면, 23년 9월말 현재 501건, 총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단속했다.

- * 건수(건): ('20) 696 → ('21) 1,054 → ('22) 771 / ('22.9) 563 → ('23.9) 501 (11% ↓)
- 중량(kg): ('20) 148 → ('21) 1,272 → ('22) 624 / ('22.9) 383 → ('23.9) 493 (29% ↑)

□ 이는 일평균 2건·건당 약 1킬로그램(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기준 건당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 * 건당 적발 중량(그램(g), 3/4분기 기준): ('20) 229 → ('21) 856 → ('22) 680 → ('23) 985

- 이는 일평균 2건·건당 약 1킬로그램(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기준 건당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 * 건당 적발 중량(그램(g), 3/4분기 기준): ('20) 229 → ('21) 856 → ('22) 680 → ('23) 985

① (경로별) 국제우편[243kg(49%)·226건(45%)]>특송[136kg(28%)·143건(28%)]>여행자[102kg(21%)·129건(26%)] > 일반화물 [12kg(2%)·3건(1%)] 순

- 여행자 밀수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자 밀수의 건당 적발량 역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핸드캐리 수하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전체 여행자 적발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 * 여행자 밀수 적발(건): ('21) 86 → ('22) 112 → ('23.9) 129 (전년 동기 대비 77% ↑)

- ** 여행자 밀수 건당 적발 중량(g) : ('20) 177 → ('21) 150 → ('22) 323 → ('23) 792

② (품목별) 필로폰 [246kg(50%)·110건(18%)]>대마 [120kg(24%)·151건(24%)] > 케타민 [31kg(6%)·49건(8%)] > 합성대마 [23kg(5%)·47건(7%)] > 엠디엠에이(MDMA) [18kg(4%)·64건(10%)] 등 순

- 연령대별 주요 밀수품목을 살펴보면, ❶ 10대는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시비디(CBD)오일·대마카트리지 등, ❷ 20~40대는 해외직구를 이용한 케타민·MDMA 등 파티용 마약류, ❸ 50대 이상은 여행자를 통한 대마초·거통편 등이다.

- * 연령대별 적발 비중(%): (10대) 1%, (20대) 29%, (30대) 32%, (40대) 19%, (50대 이상) 19%

- 한편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남·여간 밀수사범 비중*은 3:1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한 필로폰·합성대마 등 강성마약, 여성은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CBD오일·거통편 등 진정효과 위주의 마약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 성별간 적발 비중(%), 남:여: ('20)76:24 → ('21)74:26 → ('22)71:29 → ('23.9)76:24

③ (국가별) 태국 [123kg(25%)·69건(13%)] > 미국 [116kg(24%)·154건(29%)] > 라오스 [47kg(10%)·14건(3%)] > 베트남 [35kg(7%)·72건(14%)] 등 순

- 골든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발 적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밀수로 처음 적발된 국가의 수 및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적발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 최초 적발국: ('21) 2개국, 0.02kg → ('22) 3개국, 3.9kg → ('23.9) 6개국, 26.5kg

- 밀수사범의 국적은 한국(44%) > 미국(15%) > 베트남(10%) > 태국(8%) 등 순이며, 특히 외국인 사범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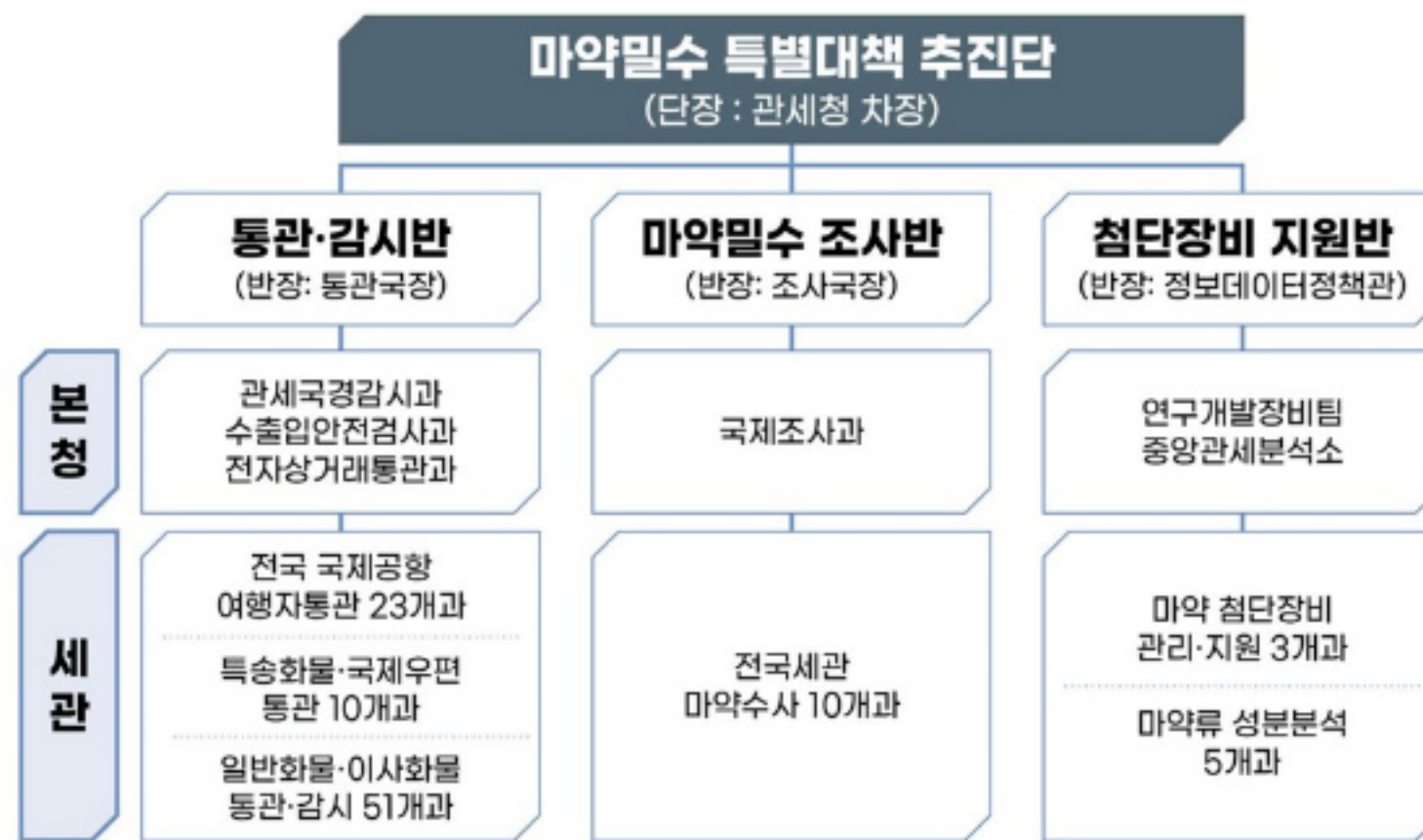
- * 외국인 사범 적발 비중(%), 건수 기준): ('21) 35 → ('22) 53 → ('23) 56

정부동향

'20	'21	'22	'23.9
터키	그리스, 덴마크	이란, 레소토, 우간다	가나, 노르웨이,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파푸아뉴기니

□ 한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세관의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특히 기존 통관·조사 등 업무 구분에 따른 단편적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유기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 신종마약 증가 등에 따라 대두되는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비 및 연구개발(R&D) 담당 부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 추진단을 통해 시행 예정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검사율을 초과하도록 하고, 전신검색기* 활용을 대폭 늘려 신체 은닉 등 마약밀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 * ('22.9)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1대 → ('23.10) 인천공항 T1 2대, 제2여객터미널(T2) 1대 → ('24~) 인천·김해공항, 인천·평택·군산항 등 주요 공항만에 총 13대 추가 설치
- (파괴검사 확대) 엑스레이(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된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파괴·해체검사 비율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며,
- (국제공조 강화) 태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베트남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한-네덜란드 마약밀수 합동단속 개요

- (작전명) Op. Worm Hole 「한국과 유럽을 잇는 가상의 통로」
- (기간) '23. 9. 1. ~ 9. 30. (1개월)
- (성과) ❶한국행 우범화물 전수 합동검사, ❷주요 마약 적발 정보교환
⇒ 네덜란드발 적발 건수 50% 증가 (단속 전 월평균 6건→9건)

□ 고광호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전국세관 마약관계관들에게 지금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세관조치에 따라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브리프

지방자치단체 디지털플랫폼, 무엇이 문제인가?

 이 경 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축 및 개선

- 민간플랫폼에 익숙해진 주민들을 공공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사용자 경험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플랫폼을 개선해 나가야 함

공공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 구체화 및 역량강화

- 공공 플랫폼 운영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명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예. 조례 제정 등)을 개발해야 함
- 현재 지자체장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플랫폼을 지자체장의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장이 공공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플랫폼 정부 운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공공플랫폼 운영의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적 인적 자원 확보 및 역량 개발 계획 수립

- 디지털 부문을 다른 직군, 직렬 또는 직류와 별개로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신규 디지털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지자체 내 한정된 직급의 소수 인원이 아니라 다양한 직급의 다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총의(總意, consensus)를 형성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기르도록 해야 함

민·관 협업을 통한 기술 ·자원의 한계 극복

- 지방자치단체(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 및 운영하는 데에는 기술 및 자원 측면의 한계가 명백하게 존재함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 디지털 플랫폼의 설계 단계부터 기술 및 자원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야 함

정책브리프

01. 공공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 공공 디지털플랫폼은 플랫폼의 핵심기능과 핵심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정보제공형, 정책제안형, 민간역량중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정보제공형 플랫폼에는 빅데이터 행정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공공데이터 포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을 소개해주는 복지로(bokji-ro) 사이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홍보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등이 있음
 - 정책제안형 플랫폼에는 청와대 신문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플랫폼 등이 있음
 -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에는 전통시장 VR관 같이 지방정부 중심의 온라인 장터, 경기도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배달 앱, 공공조달 플랫폼 등이 있음

• 공공 디지털플랫폼의 유형별 특징 •

구분		정보제공형	정책제안형	민간역량중개형
핵심 기능		• 정부가 방대한 양의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단	• 시민이 정부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나 서비스 수요를 제시하는 통로	• 다양한 민간 행위자와 시민 간 상호작용의 장(場)
핵심 행위자		• 정부	• 시민·민간	• 시민·민간
정부의 역할		• 플랫폼 관리자(manager) • 정책·서비스 제공자(provider) • 플랫폼 기반 형성 이후에도 플랫폼 내에서 주도적인 공급자 역할 수행	• 플랫폼 관리자(manager) • 정책·서비스 제안을 활용한 정책 설계자(policy-designer) • 플랫폼 기반 형성 이후에는 플랫폼 내 산출물을 이용하는 소비자 역할 강화	• 플랫폼 관리자(manager) • 행위자 간 상호작용 촉진자(facilitator)/중개자(intermediator) • 플랫폼 기반 형성 이후에는 행위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역할 수행 • 특정 정책/서비스에 한해 주요 행위자로서의 참여 가능성 존재
시민·민간 역할		• 정책·서비스 이용자·소비자 • 플랫폼 내에서 수동적 행위자로 기능	• 정책·서비스 형성, 제안자 • 플랫폼 내에서 주도적 역할	• 정책·서비스 제안자, 제공자, 이용자 등 복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성공적인 플랫폼의 특성	시민·민간 관점	• 효율적으로 플랫폼에 접근하여 고품질의 정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효율적으로 플랫폼에 접근하여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제안함 • 정부가 플랫폼 상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함	• 이용자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서비스 생산의 공동주체로서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게 됨 • 사회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정부 관점	• 플랫폼의 이용자 수 및 이용 횟수가 많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	• 플랫폼의 이용자 수 및 이용 횟수가 많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 • 플랫폼 이용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음	• 플랫폼의 이용자 수 및 이용 횟수가 많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 •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양성 •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 가능하고, 플랫폼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정책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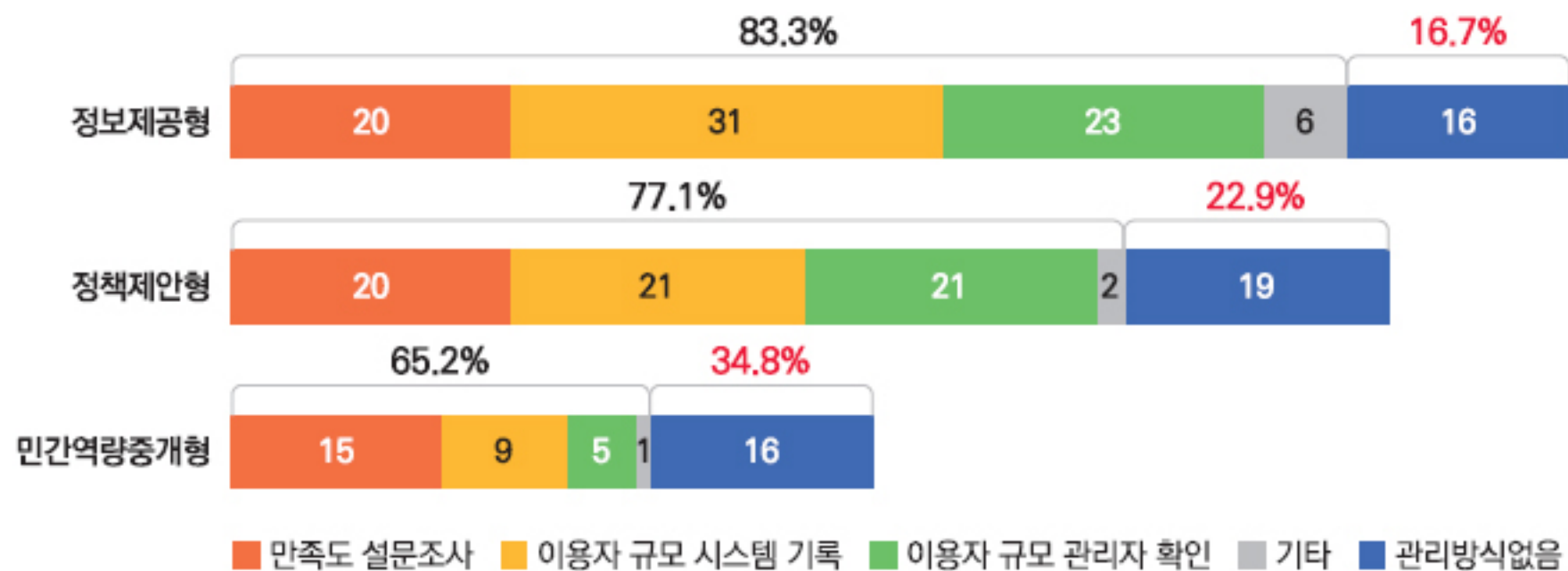
02. 지방자치단체 공공 디지털플랫폼 운영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공공 디지털 플랫폼 운영 현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 디지털 플랫폼 운영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 있음
- 조사대상 총 245개 지자체 중 96개 지자체(약 40%)가 공공 디지털 플랫폼 운영 수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과 인식, 디지털 플랫폼 정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응답하였음
- 각 유형별 플랫폼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보제공형 플랫폼은 97개 지자체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제안형 플랫폼은 62.9%에 해당하는 지자체,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은 26.8%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조사됨

• 공급자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용 정보 수집 및 분석은 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또는 정기적인 이용자 규모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이용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가진 지자체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음
- 정보제공형 플랫폼을 운영 중인 지자체의 16.7%, 정책제안형 플랫폼을 운영 중인 지자체의 22.9%,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을 운영 중인 지자체의 34.8%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용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개선에 활용하는 민간 기업에 비해 지자체의 플랫폼 운영 방식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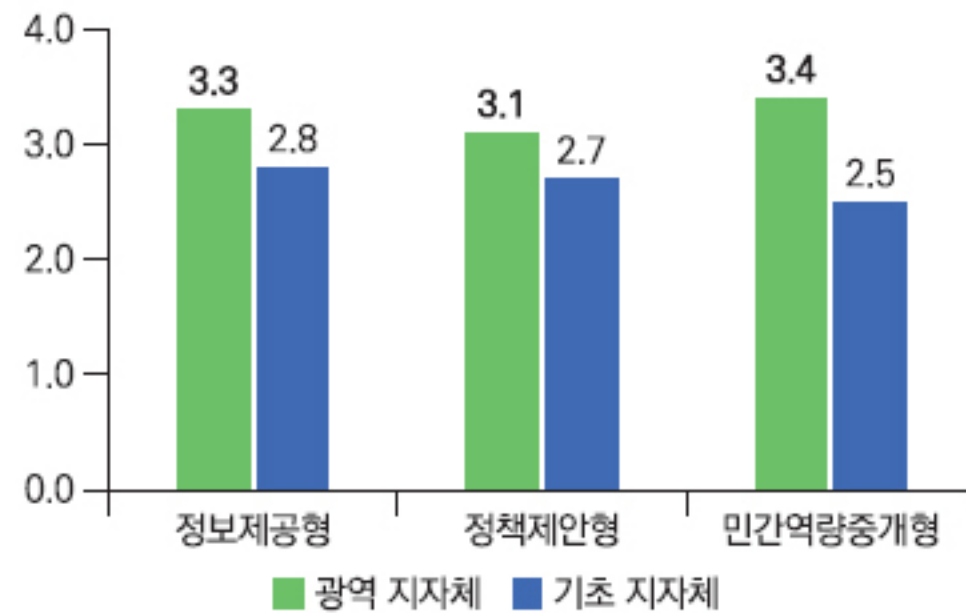


• 공공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지자체장의 낮은 관심

- 기존 연구들에서는 조직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리더의 관심을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언급해 왔으며, 디지털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도 리더의 관심은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설문 결과, 광역지자체장의 공공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반면, 기초지자체장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초지자체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지속성과 발전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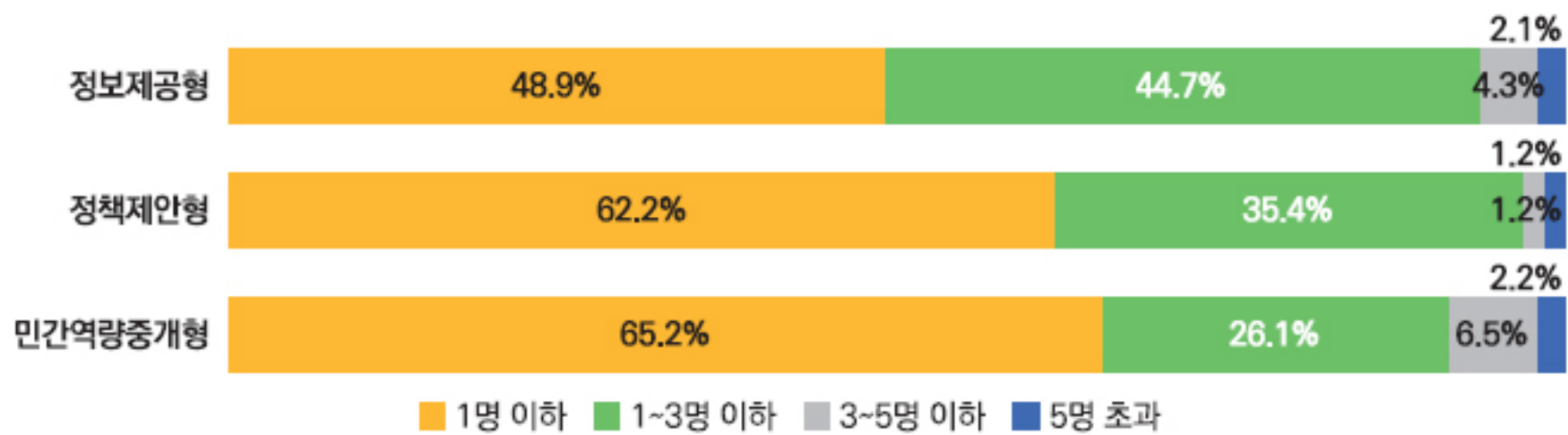
Q. 귀하의 지자체장은 귀하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보제공형/정책제안형/민간역량중개형 공공 플랫폼'의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플랫폼 유형별로 응답, 4점 척도)

정책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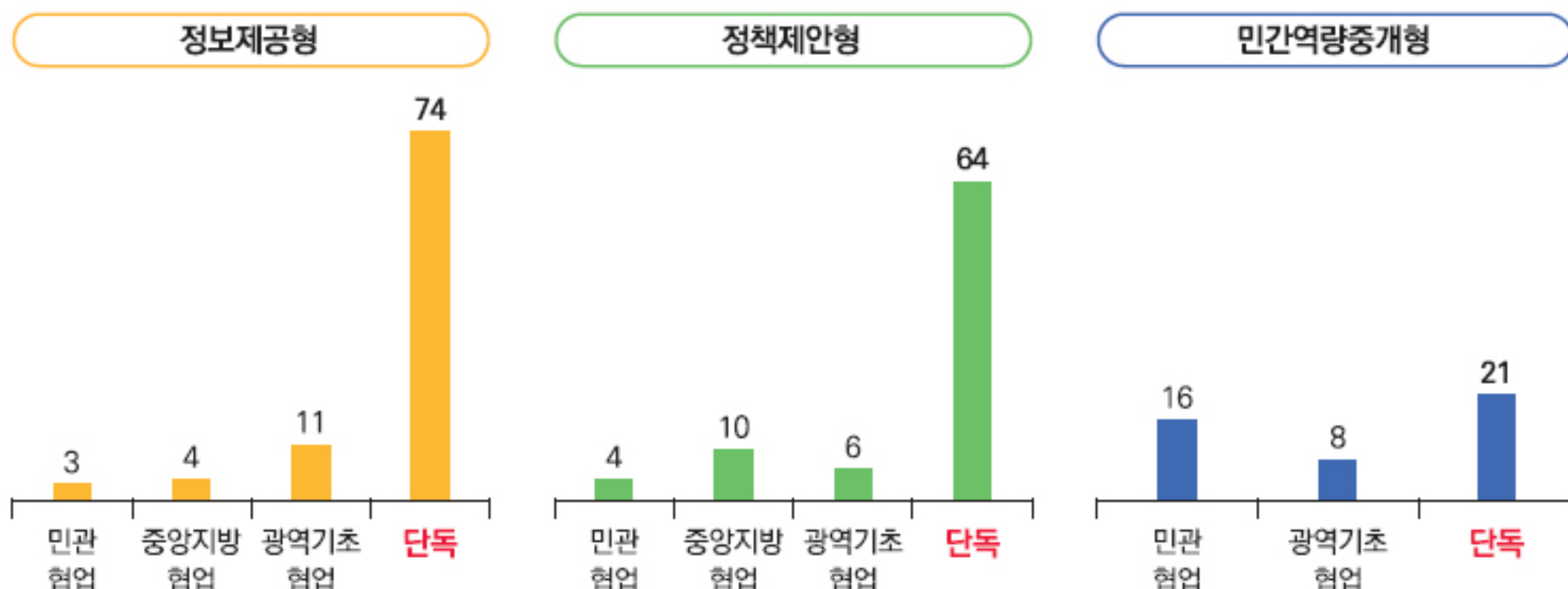
•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부족

- 세 유형의 플랫폼 모두에서 1명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자체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3명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플랫폼의 유형을 불문하고, 공공 디지털 플랫폼 운영에 있어 4명 이상의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수는 현저하게 적어 응답한 지자체 중 10% 미만으로 나타남
- 공공 플랫폼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정책 추진에 있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미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의 부족이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지방자치단체 단독 설계 및 운영 방식

- 국내 지자체 중에는 민간 플랫폼 기업 등 유관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 간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가 첨단 정보화 기술을 플랫폼에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임



정책브리프

03.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 전략

전부개정「지방자치법」시행 이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화를 위한 대안을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간 플랫폼에 익숙해진 주민들을 공공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플랫폼 사용자의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싱가포르의 Smart Nation과 관련된 시민 의견 반영 사례, 런던시의 'Your Commute' 캠페인 사례 등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공공 플랫폼의 공통점은 플랫폼 사용자들의 이용 경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임
-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명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지식,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직 자원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전략 수립 역량,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리더십 역량 등 플랫폼 정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이 가져야 할 필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지자체장의 플랫폼 정부에 대한 이해가 낮고, 공공 플랫폼에 대한 관심 및 추진 의지가 높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 플랫폼은 지역의 문제 해결 및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역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자체장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사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 셋째, 공공 부문의 디지털 인력은 디지털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공공 가치'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인재 유입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여야 함
 -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공공 플랫폼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 넷째, 민간 부문과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업이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MOU나 협의체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수요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하여,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 운영 방식을 결정하여야 함
 - 민간 디지털 혁신 전문가가 중심이 된 스마트 런던 위원회(The Smart London Board)나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세 주체가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의 예처럼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공공플랫폼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하고, 지역의 현실과 실질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함

알기쉬운 정책



통합위,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는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긴급번호 **109**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국번없이)

109

2024년 1월 개통 예정



알기쉬운 정책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인지도 및 응대율이
낮다는 **한계점 때문에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번호로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통합 취지와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통합번호(109)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번호 부여를
완료하겠습니다.**

